

다가 올 한 세대

김 경 동

(서울대 사회대 교수)

우리가 지난 날의 역사와 그 역사를 움직인 動力에 관심을 쏟는 까닭은 다
가 올 앞날의 있음직한 모습을 그려 봄으로써 한층 더 바람직한 미래를 꾸
려 보고자 하는 바램이 있기 때문이다. 과거는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단서
를 제공해 준다. 그러나 과거가 미래를 완전히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 역
사에는 인간의 주체적인 창조의 요소가 항상 작용하게끔 되어 있는 법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과거가 줄기차고 세찬 힘으로 미래를 그 나름의 주형 속에
가두어 제멋대로의 모양을 짹어내려 한다 해도 인간의 주체성과 창의는 어딘
가 새롭고 다른 조각품을 만들고야 마는 것이다.

다만, 우리가 지난 날의 모습을 눈여겨 보는 것은, 만의 하나 과거의 흐름
을 마냥 내버려 둔다면 험쳐질 미래가 우리의 삶을 지독히도 왜곡시키고 비
인간화시킬 때에 이미 늦었구나 하는 쓸모없는 회한을 미리 피해 보고자 하
는 뜻에서이다. 그것은 또한 지난날의 전철을 무심코 밟음으로써 결디기 어
려운 미래를 감수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고통을 이제부터라도 막아 보려는
뜻에서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미래에의 관심은 과거를 변증법적으로 극
복하려는 의지에서 비롯한다. 과거의 변동을 일으키고 끌어 온, 또는 그것
에 저항해 온 세력들이 미래를 결정할 개연성에 대비하면서 인간적인 선택
을 적극적으로 취해 나가려는 자세에서 비롯한다.

지난 한 세대의 한국사회는 그야말로 역사에 유례없는 격변과 소용돌이를
뒤로 하고, 따라서 아직도 불확실한 다음의 한 세대를 향해 정신없이 내닫
고 있다. 만일 우리가 이번의 공동연구에서 규정한 「산업사회화」와 그에 따
른 질적 변화인 「물질사회화」가 지속되리라는 가정을 할 수 있다면, 앞으로
한 세대는 과연 어떤 사회가 될 것인가를 따져 보는 일은, 미래연구에서 흔
히 취하는 外換法에 해당하는 미래예측법이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지향적
관심은 거기에 그칠 수 없고, 좀 더 바람직한 미래에의 꿈과 당위를 담아야
한다. 인간의 주체적 선택과 결단의 폭을 그 만큼 넓히는 일이 긴요하기 때

문이다.

우리가 발전적인 산업사회화의 모습을 그린다면 기술과학사회, 정보사회, 도시적 세속사회, 대중사회, 조직사회, 풍요사회, 이익사회 등의 날말들이 표상하는 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사회의 특색은 규격화, 획일화, 극대화, 집권화, 집중화, 다원화 등의 변화를 빤다고 한다. 그러다가 기술혁신의 진척으로 후기 산업사회로 변질해 간다는 것이 일반론이다. 이와 같은 후기 산업사회로 이전해 가면 지식과 정보가 중심이 되는 사회가 될 터이고, 그런 사회에서는 기술적 전문적 지식을 통어하는 일반적인 지식인층, 특히 경제지식인이 중추가 된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산업사회화를 일으킨 주도 세력이 기술관료와 군부 중심의 정치엘리트라는 점을 주요소로 제시할 수 있다. 이는 후기 산업사회의 성격이 모든 사회에 일률적으로 동질적이 되지 않을 소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물론, 우리사회도 공업화가 초래하는 도시화, 다원화, 대중사회화 같은 일반적인 변화가 더욱 진행될 것으로 예견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두 가지 점을 부각시켜 봄직하다.

하나는 기술관료의 세력이 더욱 공고해지면서, 보수적인 정치 엘리트와, 경제 엘리트 즉 재벌기업과의 일종의 권력 엘리트군을 형성하여 집권화를 가속화시킬 개연성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만일 이런 성향이 강화된다면 사회구조가 경직화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지 않다.

두번째는 「돈」의 가치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다. 이는 황금만능주의, 물질지상주의라는 가치로 표출될 뿐 아니라, 사회의 모든 가치, 아니 인간의 보답 그 자체마저 금전적 교환의 기준으로 가늠하는 일방적이고 왜곡된 의식의 뿌리가 된다. 삶의 즐거움이 물질의 축적과 소비, 육체적 쾌락과 만족 등에 쏠리는 생활양식으로 집약되는 사회로 변질해 왔다.

이 두 가지 요소가 상호작용하면서 조장하는 사회조직 원리와 문화적 지향은 다음과 같은 특이한 조합을 형성할 것을 예견할 수 있다.

첫째, 경제 면에서,大型成長을 계속 추구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 지향은 경제성장의 목표 설정에서부터 과행성을 드러내게 됨으로써, 경제의 균형을 깨뜨릴 뿐 아니라 국내외의 구조적 불균형으로 치닫게 될 소지가 크다. 대외관계에서 세계체계 속의 중심부에 대한 종속이 더욱 깊어질 것이고, 국내에서는 자원분배의 불평등을 부채질하기가 쉽다. 삶의 질적인 진보보

다는 양적이고 외형적인 성장에의 관심을 더욱 차극하게 되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둘째, 정치적, 사회적으로는, 지금까지 대체적인 성향이 그러했듯이, 개인의 시민적 권리와 책임에 뿌리를 두고 시민 각자가 인간으로서의 자아완성으로 나아가는 행복의 추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민주적 시민사회의 형성이라는 가치는 이데올로기적 수준에 머물고, 부국강병의 국가주의적 목표를 충실히 추구하는 일의 실질적으로 강조되는 일종의 괴리현상이 두드러졌다. 이는 분단과 어려운 국제관계의 맥락 속에서 집합체로서의 생존을 위협받거나 그것을 지켜야 하는 필요를 감안하면 이해할 수는 있는 일이지만, 국가 속에 개인이 몰입하는 민주주의란 실효가 없다는 쟁점을 안고 있다. 이와 같은 성향은 엘리트의 성격과도 관련 있고, 국민의 의식과도 관계 있으며, 공식·비공식 교육과 문화적 교양, 사회교육 등의 매개를 통해 보강받는 실정이다.

이런 성향이 계속 강화된다면, 시민적 기울 위에 자발적으로 집합적 공공복지에 헌신하는 시민들이 구성하는 공동체가 형성되기보다는 일방적으로 강요되는 기울에 매어달려 사회가 외형상 질서를 유지하면서도 기본적인 근저에 집합적 유대와 국가적 동일의식이 취약한 사회가 될 것이다. 이것은 사회적 통합을 어렵게 하는 원천이 되며, 앞에서 지적한 구조적 불균형이 자아내는 긴장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체계의 능력을 상실케 할 수 있다. 결국 엘리트층은 경직된 반응으로 이에 대처할 개연성이 높고, 사회는 민주적 규칙과 합리적 타협에 의하여 공정하게 갈등을 해결하는 힘을 잃어 버릴 수 있다.

세째, 문화적인 차원에서, 인간의 가치위계가 질보다 양, 정신보다 물질, 심리적 안정보다 육체적 쾌락 등을 우위로 하는 방향으로 흐를 것이라고 한 바 있거니와, 모든 문화의 부문에서 외형적인 규모와 실적, 물질적인 부강함의 과시로 치중하여 내실 있고 질적으로 정교한 문화의 창조에 소홀해 질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경제기반이 우선 그런 방향으로 성장하기 때문이고, 사회정치적 조직과 구조가 개인의 창의력을 키우고 북돋우는 쪽보다는 오히려 이를 획일화하고 규격에 맞추려 하는 억제적 효과를 자아낼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이런 추세가 지금까지의 움직임이 외삽적으로 드러낼 것이라 추정한

다면, 우리는 그와 같은 비인간화의 흐름들을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다는 당위적인 가치 판단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한 당위적 규범을 밀받침하는 가치는 어디까지나 인간의 자아실현을 높이 떠받들고 동시에 그러한 완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힘을 모아 민족의 문화적 잠재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이루하고자 하는 열망을 담을 것이다. 돈과 강제가 조직원리의 근간이 아니라 질적인 삶의 가치와 자발적 봉사에의 참여와 혼신의 가치가 우세한 일종의 자발적 복지사회일 것이다.

이와 같은 가치지향이 요구하는 사회변동의 흐름을 간추려 본다면, 획일주의에서 다원주의로, 경직함에서 유연함으로, 타율에서 자율로, 집권화에서 분권화로, 집중에서 분산으로, 대형화에서 중소형화로, 급격에서 완만으로, 소유(having)의 가치에서 존재(being) 자체의 보람으로, 양에서 질로, 물질지상에서 정신중시로, 경제성장위주에서 문화적 성숙으로의 이행일 것이다. 지난 한 세대의 변화가 급속하고 의형적으로 대규모화해 왔으며 따라서 이런 변동을 앞으로 계속 감당하기가 어려워졌다. 과거의 변화를 위해서는 집권적 경직과 획일이 단기적 효과를 가져 왔을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는 이미 상당히 다원화의 길에 들어섰고 사람들은 더 질적인 삶의 가치와 더 큰 참여에의 열망을 키워 왔다. 균형있는 정책 우선순위와 욕구의 조절 그리고 사회구조의 균등화는 피하기 어려운 과제로 우리에게 다가 왔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를 이끌어 가고 결정을 내리는 엘리트가 과거의 타당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대로만 밀고 나아가겠다는 생각을 고집한다면, 그것이 자아멸 긴장과 욕구좌절에서 초래할 사회적 갈등은 기대하는 것보다는 감당하기 어려운 경지에 이를지도 모른다. 앞으로의 한 세대란 21세기의 문턱을 한 발자국 넘어선 때까지로 뻗친다. 세계 전체가 변동의 관성이 일으키는 가속도로 인하여 이제까지 인류가 겪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폭이 크고 높은 격변의 파도 속에 밀려 들 확률은 더욱 커졌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의 민족으로서 살아 남고 각 개인이 그나마 삶의 행복을 자유로이 추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데에는 엘리트 여부가 있을 까닭이 없으며, 각계각층의 온갖 힘들이 한꺼번에 움직여도 될까 말까 할지도 모른다.

우리의 분단은 바로 이 점에서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이며, 통일을 이루하고자 하는 노력은 남북의 모든 부문과 계층이 합심하여 합리적인 통합의 길을 찾는 방향으로 경주해 마땅하다. 우리가 이러한 각오로 우리의 역

량을 키워나간다면, 서양의 문명사가들이 예견하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다
가 올 한 세대에는 세계문명의 새로운 진원지로서 발돋움할 가능성은 있음직
하다 할 것이다. 여기 우리의 선택이 있고 역사 창조의 기회가 있다.